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닭검정연구소 보금자리 마련 전남 해남에 검정연구 및 교육시설 들어선다

검정연구소가 전남 해남에 새로운 둠지를 틀고 본격적인 업무준비에 들어갔다. 본회는 지난 2010년 검정을 실시해 오던 안성 소재 닭검정연구소(닭경제능력검정소)가 시설이 노후화 되고 주변환경 오염 등으로 능력검정에 한계를 느껴 새로운 장소로 이전키로 하고 8월 매각 이후 후보지를 물색해 왔다.

1년여 동안 전국 80여곳을 돌아본 결과 전체 후보지중 최종 적합지는 전남 해안군 계곡면 법곡리로 확정되었다. 최종 결정은 지난해 12월 임시대의원총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서면결의를 통해 대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 결정된 검정소 부지는 총 면적이 304,364㎡(약 92,000평)로 132,232㎡(약 40,000평)의 개발면적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앞으로 검정시설, 부화시설, 부대시설, 교육관 등 19,834㎡(약 6,000평)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매입 등 이전소요비용은 약 20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정시설은 금년부터 정부의 일부 보조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부터 검정소 시설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및 부지조성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에 착공될 검정시설은 육용·산란종계 각 1만수 육용·산란계 각 5만수가 신설될 예정이며, 교육시설로 양계기술훈련센터(KPTC ; Korea Poultry Training Center)를 설립하여 선진 양계기술 보급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검정시설은 종계검정이 추가되었으며, 양계기술훈련센터는 양계농가 전문교육, 외국인 양계연수생 교육, 친환경 기술교육, 개도국 기술지원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닭경제능력 검정소는 1966년 1월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에 검정소를 개소하여 산란계 6회 육용계 2회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1971년에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으로 자리를 옮겨 산란계 11회, 육용계 11회를 검정한 바 있다. 이후 1982년에는 검정소 매각 관계로 검정계를 건국대학교 충주분교로 이관하여 1년간 검정을 실시했고, 1983년부터는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에 부지를 매입하여 지난 2010년 8월까지 산란계 26회, 육용계 73회의 검정을 실시하여 검정을 실시한 이후 총 45년 동안 산란계 43회, 육용계 86회의 검정을 하면서 농가들이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본회에서는 검정소 시설을 위해 지부담을 포함해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검정시설 및 교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한우개량에 매년 200여만원, 젓소개량에 130여만원, 돼지개량사업에 6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닭개량사업에는 3천만원이 지원될 정도로 양계분야의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정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의 뒷받침이 따라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AI 발생시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

정부는 AI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SOP)를 개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하면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발령하되, 적용범위 및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초동방역에 허점이 나타날 경우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 도계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은 물론 가축분뇨 차량 및 가금류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된다. 이 외의 모든 사람, 차량, 물품 등은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동시에 금지된다. 일시 이동제한 명령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발생농장의 역학조사에 따른 역학관련농장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완료되면 가능한데 필요시 이동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시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하여 발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치 역시 방역상황실을 운영을 강화하는 등 대체적으로 느슨하게 진행되던 것을 곧바로 경계단계를 발령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한 것이다. 경계단계는 이동통제가 강화되고 필요시 인접 재래시장의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조치이다.

또 한가지 달라진 것은 전국 시·군 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하여 시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이동통제,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초동방역을 통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중앙초동 대응팀은 5개반(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역학조사반, 매몰처리반) 총 8명으로 구성·운영되

며 현장 기동조치팀은 5개반 92명으로 구성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시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못해 간과될 수 있는 부분도 이번에 구성된 기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살처분 및 매물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를 선정·운영하여 차량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였고, 오염·위험지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농가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조치안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자조금 사업 활성화 기대

토종닭, 종계농가 자조금 납부 적극 협조키로

그동안 자조금거출에 소극적이었던 (사)한국토종닭협회와 종계업계에서 자조금 거출과 참여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하면서 육계자조금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금년 목표했던 거출금 7억원 달성에 큰 어려움이 예견되었으나 지난 11월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그동안 토종닭 농가에서 거출한 자조금 약 2억원을 납부함으로써 당초목표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자조금 거출에 소극적이었던 제주와 전남지역의 육계농가들이 적극 동참하는가 하면 종계부화분담위원회에서도 거출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거출에 활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육계일부 농가와 소신있는 일부 도계장들의 참여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던 모양새에서 육계, 삼계, 종계, 토종닭까지 모두 참여하는 명실공이 범 육계업의 모든 분야가 참여하면서 보기 좋은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거출 예상금액을 10억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등 모든 업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조금을 합친다면 21억6천만원으로 이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육계산업 발전은 물론 자조금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농가홍보와 설득작업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하철 광고, TV광고, 요리솜씨 대회, 각종 연구용역사업 등 실질적으로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들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함께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육계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실어주는 2012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